

코로나發 글로벌 동시 쇼크... 경제 '기저질환' 치료해야 산다

전광우의 세계 경제 읽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前 금융위원장

“경제 위기는 반복된다. 원인과 과정이 다를 뿐.”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세계은행 총재를 지낸 제임스 올펜슨의 말이다. 지난 20여 년간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으나 우한 코로나의 충격은 차원이 다르다. 과거 경제 위기와 달리 수요·공급의 동시 쇼크에 따라 실물·금융 복합 위기로 번지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5.6%에서 2%로 낮췄고 금융 위기 분야 세계적 권위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 경제의 제로성장이라는 초유의 경기 침체까지 거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식화와 함께 세계경제는 초대형 악재가 겹친 퍼펙트 스톰을 만났다. 국제금융협회(IIF)는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1%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위기 대응 수단이 과거보다 제한적이라는 부정적 평가와 아울러 성장 예측치를 대폭 내렸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S&P는 국내 성장률을 정부 목표치 2.4% 대비 1.4%와 1.1%로 끌어내렸고 골드만삭스와 노무라증권은 각각 1.0%와 0.2%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협회, 올 성장 전망 2.6%→1%로

국제금융시장은 패닉 상태다. 지난 한 달 남짓 사이 세 번의 블랙 먼데이를 기록했다. 지난 2월 3일 코로나 진원지 중국 상하이 지수 폭락, 중국을 넘어 한국 등의 확진자 급증 시기인 2월 24일 미국 다우지수 급락, 그리고 글로벌 확산이 본격화된 3월 9일에는 주가·금리·유가가 동반 폭락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초토화됐다. 극심한 투자자 불안과 널뛰기 장세 속에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이번 주 연준(Fed)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커졌다. 원유 가격도 1991년 걸프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 배럴당 30달러대로 떨어졌다. 수요 급감과 사우디

과거와 다른 점은 수요·공급 동시 충격에 실물·금융 복합 위기 경제성장률, 주가·금리·유가 동반 초토화... 누가 살아남나 싸움 무리한 돈 풀기 피하고 달러·엔화 통화 스와프 복원 시급해

러시아의 '유가 전쟁' 때문이지만 불똥은 재무 구조가 취약한 미국 세일 업계로 튀었다. 코로나 팬데믹의 원조는 중국이지만 글로벌 확산의 고리로는 확진자가 급증한 이탈리아·이란·한국이 꼽힌다. '유럽의 우한'이 된 이탈리아는 지난 1월 말 중국인 관광객이 최초로 확진 판정된 후 양국 간 직항 노선 운항만 중단하고 육로와 항공로는 막지 않았다. 중국과 우호 관계가 유지였다. 이탈리아는 서유럽 국가 중 유일하고 G7 국가로도 유일한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이다. 이탈리아가 중국

에 손 벌린 배경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빚어진 재정 악화다.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독일의 세 배에 달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15년째 3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이란은 2018년 미국의 핵합의 파기 후 중국과 경제협력을 늘리며 중동 지역의 일대일로 거점국이 되었다. 뉴욕타임스(NYT) 지적처럼, 이란은 중국의존도 확대에 코로나 발생 후 중국인 유입 제한에 신속 대처하지 못해 화를 키웠다. 한국도 유사한 실책을 범했다. 전형적 위기관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 전반부 초동

대처와 후반부 출구 전략이다. 초기 대응의 원칙은 '신속·과감하게'이고, 출구 전략의 기본은 '신중·차분하게'인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한 셈이다. 출구 전략을 서두르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국제 공조·개별 국가, 투 트랙 해결책 필요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 극복은 국제 공조와 개별 국가, 두 차원의 해결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글로벌 위기는 글로벌 해법을 요구하는 만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이 관건이다. 이미 이란은 IMF에 50억달러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탈리아의 불길인 스페인·프랑스 등 주변국으로 번지면서 다급해진 곳은 유럽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재 -0.5%인

기준금리는 동결하되, 1200억유로(약 163조원) 규모의 양적 완화를 통해 연말까지 유동 자금을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지원할 방침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핵심 채널이었던 G20 글로벌 공조 체제가 재가동되어야 한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맞은 한국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과감한 재정 확대는 필수지만 나랏돈의 오·남용(濫用)은 막아야 한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철에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은 경계할 일이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비상식적 대응은 아니다. 둘째,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는 견지하되 무리한 팽창은 피해야 한다. 제로 금리로의 과도한 인하는 가계 부채 악화 소지가 크고 은행 재무 건전성을 훼손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다. 셋째, 재정이나 통화는 돈을 풀어도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헛일이다. 과거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촉발된 금융 위기와 달리 긴 호흡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키워야 한다. 넷째, 경제·외교 역량 강화다. 경제팀과 사령탑에 힘을 실어 대내외 리더십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축통화인 달러·엔화 통화 스와프 복원을 통해 외환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경제와 기업은 용수철 같아서 과도히 오래 눌러 있으면 복원력과 자생력을 잃는 것이 문제라 했다. 지난 3년 반시장적 정책으로 활력을 잃은 우리 기업을 살려내고 경제적 '기저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기조 대전혁이 절실한 시점이다.